

노후 경유차 교체시 최대 140만원 감면...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경제 활력

에어컨·TV·냉장고·공기청정기 에너지 1등급으로 사면 10% 환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 대량 구축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비세를 적용하면 이반페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비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신규 흡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지원 금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에너지산업 투자로 다른 업



“경제위기 극복합시다”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이동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배출권 확보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 의무화된다. 정부는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 당 부여하는 가중치를 3대에서 5대로 높여주기로 했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는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 투자에 투입된다.

녹색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연내 수립된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내년부터 총상환능력 산출해 심사

■ 가계 부채

서민 채무 원금 감면을 최대 60%로

정부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의 질 개선 노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한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부채 질도 관리하기로 했다. 서민 금융 지원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은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속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단계적으

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차주별 대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 등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조원 정도를 공급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에서 30~60%로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KTX 요금 할인 확대... 서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민생 안정

고속철 '평시할인' 30%로 하위소득 50% 본인부담상한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 서집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은 서민층의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낮추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겐 한·미·일·EU FTA 적용. 영국에 대한 낮은 수출비중으로 단기 직접적 영향 제한적

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던 것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이번 방안이 실행되면 20만~25만명이 1인당 매년 30만~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하위 50%의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KTX 등 고속철도는 '365 평시할인' 할인 폭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도 최대 30%에서 40%로 늘린다. /연합뉴스

중도금 대출 기준 1인 2건·한도 3~6억원으로

■ 부동산

미분양 증가... 분양시장 냉각 우려

정부가 28일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도 3억~6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데다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고 브렉시트 여파로 국내의 금융시장도 불안 요소가 커진 가운데 그나마 분양시장을 이끌어오던 수도권과 서울 강남 재건축, 부산 등 일부 지역마저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은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자칫 분양시장이 급속한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 등지의 청약시장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그나마 분양시장을 움직이던 서울·수도권마저 청약 열기가 꺾일 경우 분양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재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경우 제2 금융권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개인 신용보증 또는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한 대출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정파 먹거리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빨라질수록 새로운 것에 자꾸 사로잡히고 간편해진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먹거리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나 변함없는 춘향이의 마음처럼 농민의 진심을 지켜갑니다

